
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

2021. 11. 23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 . 추진배경	1
II . 비전 및 전략	2
III . 세부 추진방안	3
IV . 향후 추진일정	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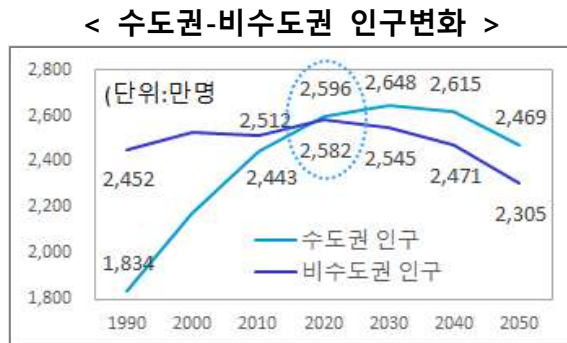
I. 추진배경

□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, 수도권-지방 간 양극화 심화

- 전국 시군구 228개 중 105개(46%)가 소멸위험지역이고 이 중 97곳(92.4%)가 비수도권인 만큼, 지역은 심각한 소멸위기 상황에 직면
- '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(50.2%)하였고,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* 증가 및 수도권-지방 양극화 심화** 추세

* (주거)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 ('20년 기준) : 수도권 (8.0배) > 전국 (5.5배)
(교통)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35.4조 (전국 대비 52.2%)

** 수도권-비수도권 지역총생산(GRDP) 격차 : ('10) △1.3%p → ('19) 4.1%p
일반대 신입생 총원율 : 수도권 (99.2%) > 비수도권 (92.2%) ('21년 기준)



- 청년층 인력유출로 지역 경쟁력(일자리·생활여건 등)은 점차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 구조

* (인구) 전체 인구의 50.2%, 청년층의 56.2%가 수도권 거주 ('20년말 기준)

□ 지역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지역성장·균형발전 전략 필요

- 부·울·경, 충청권 등 지방 광역시와 대도시는 초광역 협력*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 경제권역 형성을 모색 중

*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문제 해결과 규모의 경제 및 집적의 이익 실현 가능

- 한편, 생활기반(일자리·교통·주거 등)이 부족한 낙후지역 포용도 필요

☞ 제3기 인구정책TF를 통해 지역정책반을 구성('21.2, 국토부·행안부 공동주관)하고 '지역소멸 선제대응방안'을 마련

Ⅱ. 비전 및 전략

◇ (비전) 균형발전 및 지역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지역 성장잠재력 확대



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협력 활성화	초광역협력 추진기반 구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초광역권 계획 도입 2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
	인재·자본· 일자리 유입 성장거점 육성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지방 대도시·도심융합특구 조성 2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3 청년인재를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
	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조성 2 쇠퇴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 3 농어촌 자립기반을 위한 맞춤형 사업추진
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	지역 주도, 중앙 지원 추진체계 구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지역 주도 인구활력계획 수립
	지역의 정책 실행력 강화 지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2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인구활력 제고

Ⅲ. 세부 추진방안

1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협력 활성화

1. 초광역협력 추진기반 구축

◇ 초광역협력* 추진전략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지속성을 가진 주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여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

* (초광역협력의 개념) 지역 주도의(주체) 연계·협력을 통해(방식)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(공간) 초광역적 정책·행정수요에 대응하여(내용) 지역의 경쟁력 제고(목적)

① 초광역권 계획 도입

- ☐ (추진방향) 공간·산업·인재 등 범부처 역량을 거점으로 결집한 초광역 경제·생활권 형성을 위해, 추진전략인 '초광역권 계획' 도입
- ☐ (주요내용) 2개 이상의 지자체(협업) 또는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(20년 단위)을 제시하는 계획
 - ①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, ②초광역권 공간구조의 정비 및 기능분담 방향, ③기반시설, ④산업발전·육성 관련사항 등을 포함
- ☐ (제도화) 국토기본법 개정("21.6 발의)을 통해 계획의 법적기반 마련

②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

- ☐ (추진방향) 초광역협력의 안정성·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견고한 추진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
- ☐ (지원사항) 자치단체 간 연계·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행·재정 지원
 - 특별지자체 설치 소요재원(전산시스템 구축 등) 및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교세로 지원하고, 구성 지자체 대상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등
 - 지역이 필요로 하는 범부처 사업을 패키지 지원하고 인센티브*를 부여하는 '초광역특별협약',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'분권협약' 도입

* 재정(국고보조율 인상 등), 규제(기준완화 등), 지원사업(우선선정 등) 특례

2. 인재 · 자본 · 일자리 유입을 위한 성장거점 육성

- ◇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및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초광역권의 성장동력으로 육성

①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

□ 도심융합특구의 특징

- 특구 내에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복합혁신공간 및 배후시설을 구축하고,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 및 기업성장 도모
- 문화·산업·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*한 플랫폼형 개발로, 산업육성, 연구지원 등 특정목표에 국한된 기존 특구와 차이** 존재

* 선정된 사업지 3곳(대구·광주·대전)은 복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(~'22년)

** 기존특구와 달리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고, 도심에 조성하여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

□ 기업 생애주기별(유치→성장→인재정책) 범부처 지원 패키지 제공

① 기업유치 지원

- (특구 중복지정)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지역별 산업 환경에 적합한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특구의 중복지정 우선 검토

《 범부처 사업지구 중복 지정 대상 및 기대효과 》

사업지구	내 용	근거법령(주관부처)
경제자유구역	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	「경제자유구역법」(산업부)
지역특화발전특구	규제 특례로 지역특화 개발 지원	「지역특구법」(중기부)
규제자유특구	신산업 규제특례 부여	
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	벤처기업 입지·기반시설 지원	「벤처기업법」(중기부)
연구개발특구	핵심기술 R&D·사업화	「연구개발특구법」(과기부)



기대 효과

- ▶ 【대구】 경북대 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IT 관련 인재를 양성·공급하여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 추진 및 특구 내 연구소기업·첨단기술기업 창업 활성화
- ▶ 【광주】 대규모 개발가능지는 도첨산단과 연구개발특구를 중첩하여 AI, 자율주행차 산업기반을 조성하고, 도심 내 유희부지는 벤처육성시설을 조성

- (부담금 등) 사업시행자(공공부문)가 개발이익을 통해 창업공간 임대, 사무공간 제공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담금*, 취득세 등 감면

* 부담금: 개발부담금, 기반시설 설치비용, 교통유발부담금, 원인자부담금 등

- (공공지원시설 설치 지원)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의 입주·경영 및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건축물 설치 시 국비·지방비 지원

- (규제특례 지원) 규제샌드박스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*를 설치·운영

* (예시)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: ICT·산업융합·금융혁신 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·접수를 통합 운영하고 상담·법률검토·부처협의 지원

② 기업성장 지원

- (창업초기) 사업공간 제공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, 창업 실패 시 재도전을 지원하여 청년인재 정착 유도

* (공간 제공) 창업사관학교, 창업보육센터, 스타트업파크, 틱스타운

** (예시) 재도전성공패키지(중기부, '21년 207억) : 재창업 사업화 자금지원, 재창업자 전용 입주공간 제공, 역량강화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

- (판로개척) 상용화단계까지의 성장이 어려운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해 기관별 공공구매와 연계한 수요 창출

* 혁신제품 패스트트랙(조달청) : 혁신제품 선정 시 3년간 수익계약 및 공공기관의 제품 시범구매 신청 가능

- (성장·도약) 특구 내 자생력을 갖춘 기업에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*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 선도기업으로의 도약 지원

* ①글로벌 강소기업 : 해외마케팅, R&D사업 우대 등 지원(매년 200개사 선정)

②수출바우처 : 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하고, 기업은 개발·홍보·바이어 발굴 등 해외 진출시 필요한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자율이용

③ 청년인재 정착 지원

○ (창업자) 창업 지원사업 공모 시 특구 내 예비창업자 가점부여

* 예비창업패키지(중기부, '21년 1,002억) : 창업사업화 소요자금 지원 (최대 1억원) 및 창업교육·멘토링·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

○ (지역인재) 양질의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자체·대학·지역기업이 연계·협력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정착 지원*

* '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(교육부)' 공모 등과 연계

○ (정착지원) 청년층 관심사항인 문화 편의시설 접근성, 주거환경 편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·주거시설 지원

- 기업지원시설, 문화·주거시설 등 조성 관련 부처별 사업* 공모 시 우선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검토

* 캠퍼스혁신파크·일자리연계형 주택(국토부), 그린스타트업타운, 틱스타운(중기부) 등

※ 지방에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(현재 약 450社)와 같은 매력적인 기업공간을 조성하려면, 최소 지방 대도시* 정도의 입지여건 + 각종 혜택 제공 필요

* 지방대도시는 과거에 인재, 기업 유출을 막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 수행

☞ 기업이 수도권 대신 지방대도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, 지역과 기업수요를 적극 반영한 범 부처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할 예정

□ 안정적 사업을 위한 특구 제도화 추진

○ 산업·주거·문화가 융합된 거점 형성을 위해 칸막이 없는 범부처 지원·관리를 내용으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('21.5 발의)

◆ 법안 주요내용(강준현 의원안, '21.5)

- (정의)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산업·주거·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민·관의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
- (지정절차) 기본계획 입안 ▶ 기본계획 심의 ▶ 기본계획 승인(지구지정)
▶ 실시계획 수립·심의 ▶ 실시계획 승인
- (지원) 부처별 사업지구 및 규제샌드박스 선정 시 우선 지정 검토
부담금(12종) 감면 및 기반시설 설치 시 국비·지방비 지원 등

② 혁신도시의 발전기반 확충

□ 추진방향

- 혁신도시가 초광역권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주 환경조성 및 앵커 공공기관의 투자·인재 채용확대 등을 추진

□ 추진내용

- (도첨산단) 미분양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첨단산단(비즈파크)을 지정하여, 기업공간·공공지원시설·일자리연계주택 등 복합 개발 추진

*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업종규제 완화 등을 병행하여 기업 유치 촉진
(클러스터 : 지역별 특화산업 위주 → 도첨 : 첨단산업·복합·지원시설 가능)

- 클러스터 분양율이 가장 낮은 충북 혁신도시*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시범지정하고, 이후 他혁신도시로 순차 확대

* '21.6 분양현황 : 총 684만㎡(74필지), 분양 244만㎡(47필지), 미분양 440만㎡(27필지)

- (산업육성) 기업유치·창업지원 등 혁신도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융합캠퍼스 및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사업 신규 추진

* '22년부터 매년 3개소 씩 혁신융합 캠퍼스(총 6개소·198억원) 및 혁신기업 공유오피스(총 9개소·194억원)를 선정하고 공사 착공

- 다양한 정주인프라*와 스타트업·사회적기업 등 소규모 창업공간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11개소** 설치(연내 착공 완료)

* 문화시설, 보육시설, 주민 커뮤니티시설, 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

** 전북(완주), 전북(전주), 제주, 경남, 경북, 울산, 강원, 충북, 대구, 부산, 광주-전남

- (발전기금 조성) 초광역권 내 혁신도시와 인근의 각종 상생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발전기금 조성을 지원

* ①기업유치, ②공공기관 협력사업, ③지역주도 상생발전사업 등

- (지역인재 채용확대) 지역인재* 채용범위를 '초광역화'하고, 채용 확대(현재 '22년까지 30%)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

* 공공기관-지역대학 협업으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, 인력교류·채용 활성화 병행

3 청년인재 정착을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

□ 추진방향

-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대학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 대학의 역할 재정립

⇒ 대학 내 유휴부지를 기업공간, 창업지원, 주거·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하여 산·학 혁신생태계 구축 추진

□ 추진내용

◇ 「캠퍼스혁신파크 조성방안」 발표('19.5, 국토·교육·중기부)한 이후 현재까지 총 5개 대학*을 선정하여 추진 중

* <1차> 강원대·한남대·한양대ERICA('19.8), <2차> 경북대·전남대('21.4)

- (1차 선정) 강원대, 한남대, 한양대ERICA 3곳을 선정('19.8)해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 후 현재 단지 조성 공사 중('22.下 준공예정)
- '22년 상반기에는 창업·성장기업에게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'산학연 혁신허브*' 조성에 착수하고, '23년 준공 및 입주 추진

* 현재 인허가를 받고 착공 준비 중

- (2차 선정) 경북대*, 전남대 2곳을 선정('21.4)하였으며 현재 산단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(대학·LH)

* 대구 도심융합특구('20.12 선정)와 연계 개발할 예정

- '22년 산단 지정을 완료하여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'24년 하반기에는 준공과 기업 입주 등을 순차로 추진할 계획

- (전략마련) 기업입주 시기('23~)에 대비, 산학연 허브 운영 및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*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('22)

* 교육부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·운영,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관련 사업, 중기부의 창업보육센터, 창업존 등 기업·창업지원 사업 연계지원 추진

3.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

- ◇ **낙후지역에 주거플랫폼을 조성해 '주거+일자리+생활SOC'를 함께 공급하고, 지역 재생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자립기반 확보**

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조성

- (개요) 농산어촌 지역에 '주거+일자리+생활SOC'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구축하여 '일자리-인프라-사람'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 조성

< 3 Track 추진전략 >

구분	주거	생활SOC	일자리
Track 1	국토부 LH	국토부 공모사업 (지역개발사업, 도시재생뉴딜)	지자체
Track 2		국토부-농식품부-해수부 협업 (농촌협약, 어촌뉴딜)	
Track 3		범부처 협업 (균형발전위원회 특위 중심)	

- (시범사업 추진) 연말까지 시범사업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, 내년 부터 주요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성공사례를 창출

* (선정 완료) 지역개발사업 12건, 도시재생뉴딜 4건, 농촌협약 5건

** (평가 중) 어촌뉴딜, 범부처 협력사업(균형위)

- ① (작은학교 연계) 폐교위기의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20호 내외를 공급하고, 문화센터 및 안전보행로 등 조성(영동, 옥천, 거창 등)

- ② (청년창업 연계) 청년 행복주택(30~100호 내외)과 함께, 지역별 특성·수요에 맞는 창업 인프라*, 생활·문화시설 등을 조성(정선, 청양, 상주, 의성 등)

* 창업지원센터·공유공간(청양, 의성, 하동), 창작·판매를 위한 스튜디오(정선), 스마트팜 교육·창농시설(상주)

- ③ (일자리 연계)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등과 연계, 임대주택 100호 내외를 공급하고, 생활체육시설, 돌봄시설 등이 복합된 공간 조성(고창, 강진, 영암 등)

- (사업확산) 주거플랫폼의 대상지역을 농산어촌(읍·면)에서 시·군(읍·면·동) 단위로 확대하여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

- 또한, 농촌협약, 어촌뉴딜 외에 농공단지(산업부) 등 타부처 연계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

② 쇠퇴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

□ 추진방향

- 지역 주도로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쇠퇴 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'도시재생 뉴딜정책' 추진
- '도시재생 뉴딜 로드맵'을 수립('18.3)하여 뉴딜사업에 본격 착수, 5년간 총 500곳 추진을 목표로 현재 총 456곳을 선정·지원('21.11)
- * 연평균 약 10조원 투자 : 재정 2조(국비 0.8조), 기금 4.9조(도시계정 1.1조), 공기업 3조
- 전국 기초지자체 86%(197/229)에서 진행 중이며, 도 지역 사업이 70.4%(321곳)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

□ 추진내용

- ① (지역특화재생)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·문화·경관·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부처협업을 통해 특화된 재생모델을 마련
- * (문화재청 협업) 전주시·밀양시-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, 전시·공연장, 예술인 행복주택 조성
- ② (상권 활성화) 원도심 내 혁신거점(어울림센터), 주차장 및 특화가로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, 창업 교육 및 공간 조성으로 청년 창업 지원
- ③ (생활SOC 확충) 주거환경 만족도 제고 위해 뉴딜사업(456곳) 추진으로 생활SOC 총 1,202개*와 공영주차장(395개소) 및 공원(239개소)을 조성

< 건축물 단위 생활SOC 세부시설 구분 >

순위	주요 기능	개수	순위	주요 기능	개수	순위	주요 기능	개수
1	문화시설	525	4	아이돌봄공간	203	7	생활체육시설	127
2	취창업지원공간	382	5	노인복지시설	171	8	행정시설	99
3	공동작업장	361	6	작은도서관	148	9	건강지원센터	92

- ④ (주거재생) 집수리사업(1.2만호) 지원 및 방치된 빈집(130곳, 1,223호), 위험건축물(D등급 이상)을 생활SOC로 탈바꿈하여 주거환경을 개선
- ⑤ (스마트재생) 재생사업에 스마트기술*을 연계하여 쇠퇴·노후지역의 스마트화로 신·원도심 간 균형발전 촉매 역할

* 스마트 안심보행·횡단보도·주차장·화재감지·전광판·안심벨·도서관·버스정류장·안심귀가쓰레기통 등

**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18곳,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31곳 추진 중

③ 농어촌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맞춤형 사업추진

□ 농촌공간 정비·재생 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 추진 등

- (제도개선) 농촌 지역 난개발 방지, 체계적 개발 및 계획입지 유도를 위해 농촌특화지구* 도입 등 토지 이용계획 보완(국토부 협의)

* 예시 : 농업경관·유산지구, 축산지구, 재생에너지 등 농촌 특성에 맞게 구획화

- (농촌재생뉴딜) 농촌협약*을 기반으로 ①공간정비, ②일자리·경제활성화, ③주거·경관 개선, ④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연계·패키지 지원

* 농촌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-지자체 간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, 농촌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지원

- (공간정비)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 계획을 토대로 축사·공장 등 유해시설을 이전·집적화하여 농촌 난개발 정비를 지원

* 농촌공간계획수립 및 재생지원사업(개소당 140억 지원, '21년 5개소 → '22개소 40개소)

- (일자리·경제 활성화) 노후 농공단지에 첨단기술 도입·인프라 등 지원으로 기업유치, 창업·주거공간 마련으로 청년 창업 및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

- (주거·경관 개선) 주거 여건이 취약한 마을 대상 주택 정비 등 지원하고, 경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·유지

- (사회서비스 제공) 복지·문화·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SOC 등 구축하고, 사회적 경제 기반의 지역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

주요 정책분야	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 연계 사업
일자리 창출	신활력플러스,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,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등
정주 및 경관 개선	중심지활성화, 기초생활거점조성, 경관보전직불,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등
사회서비스 확충	사회적농업활성화,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, 스마트 사회서비스 개발·보급 등
농촌 공간 정비·재생	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등

- (귀농귀촌) 농촌이주 준비에서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·서비스를 맞춤형 지원하는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구축(~'23, 1단계 '22년말)

- 이주 정보제공·상담·교육을 위한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센터 지정 확대*

* ('21년) 85개→('23년) 100, 인구감소지역은 전입자 정착 지원 예산 추가 지급

- (청년농 지원)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를 확대*하여 청년 지원 강화

* ('18~'20년) 연 1,600명 → ('21년) 1,800명 → ('22년~) 2,000명

□ 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 및 어촌정착 지원

- (어촌뉴딜) 선착장, 대합실 등 어촌지역 생활 SOC 개선 및 지역 특화 사업을 지원하는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확대 시행('21 250개 → '22 300개)
 - 어촌지역 신규 인구 유입 지원을 위해 일자리·소득 창출, 정주여건 개선, 안전 시설 보강 등 「어촌활력증진 사업」 추진(어촌재생 4개소, '22년)
 - * ①(기존) 시설현대화·특화개발 + ②(추가) 주거·일자리·청년육성·생활서비스 등
- (국가어항) 민간투자 확대로 어항기능을 활성화하고,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여 국가어항을 어촌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조성
 - * 「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」 수립('21.7월), '25년까지 국가어항 연평균 민간투자 700억 원, 연평균 관광객 5,500만 명 유치 추진
- (청년어선임대) 청년층의 어촌지역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유희어선 등을 임차하여,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
 - '22년 시범사업(10척) 시행 및 효과평가를 통해 사업확대* 추진
 - * '30년까지 어선어업 종사자 신규인력(귀어인 등) 1만명 양성 목표
- (귀어귀촌 지원) 귀어인 창업자금 및 정착지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귀어학교 확충 및 지원확대** 등 귀어인에 대한 정착지원 확대
 - * (창업자금) '21년 51억 → '22년 56억, (정착지원금) '21년 200명 → '22년 220명
 - ** (귀어학교) '21년 4개소 → '23년 7개소, '22년부터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
- (귀어인의 집) 신규 전입자가 일정기간 어업·양식업 등 기술을 습득하고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'귀어인의 집' 제공
 - 어촌계·어항 유희부지 등을 장기임차하여 주거시설을 조성* 하고,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어촌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지원
 - * '22년 6개소 시범설치·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
- (통합정보 플랫폼) 지역별 일자리현황, 어촌계 가입조건 등 귀어귀촌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귀어귀촌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

1. 지역 주도, 중앙 지원 추진체계 구축

- ◇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, 중앙은 지원하는 체계 구축

①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□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

- (법적 근거) 균특법 개정('21.6월 시행)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
- (지정·고시) 인구감소 관련 8개 지표*를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, 이를 토대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·고시(10.19.)

* 연평균인구증감률, 청년순이동률,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

□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

- (추진배경) 재정 지원 위주의 「균특법」을 보완하기 위해, 구체적인 지원 사항*을 규정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정 추진

* 지역 주도성 강화, 지역간 연계·협력, 제도특례 등

- (추진방향) 현재 국회에 발의*된 제정안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사항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

* 총 7건 법안 발의(여 - 한병도, 서삼석, 이원택, 김승남 / 야 - 배준영, 김형동, 이만희)

<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」 주요내용 >

【 지역 주도성 강화 】

- (지역주도계획) 시군구는 법에 정한 특례·시책 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, 시도 및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상향식 계획 수립
- (생활인구 증진) 지역과 정기적 교류하는 생활인구 정의 및 지원시책 근거규정 마련

【 지방소멸 대응 협력 기반 확충 】

- (생활권연계·협력) 복수의 지자체 간 연계·협력 시책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
- (협력협약) 부처-지자체 협약 체결 등 지역·부처간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

【 제도 특례 】 재정·세제·규제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 지원

2 지역 주도 인구활력계획 수립 지원

□ 인구감소지역이 주도하여 종합적인 인구활력계획 수립

- (시·군·구) 인구활력 증진을 위해 인구감소 원인, 지역 특화자원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시군구 계획을 수립
- (시·도) 시·군·구 간 연계·협력을 위한 광역 단위 사업, 시·군·구 개별적 지원사업 등을 제시

※ 인구감소지역-그 외 지역, 인구감소지역-시·도 등 다양한 연계 추진

- (중앙부처) 국고보조사업 중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적합한 사업을 지역의 인구활력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컨설팅 지원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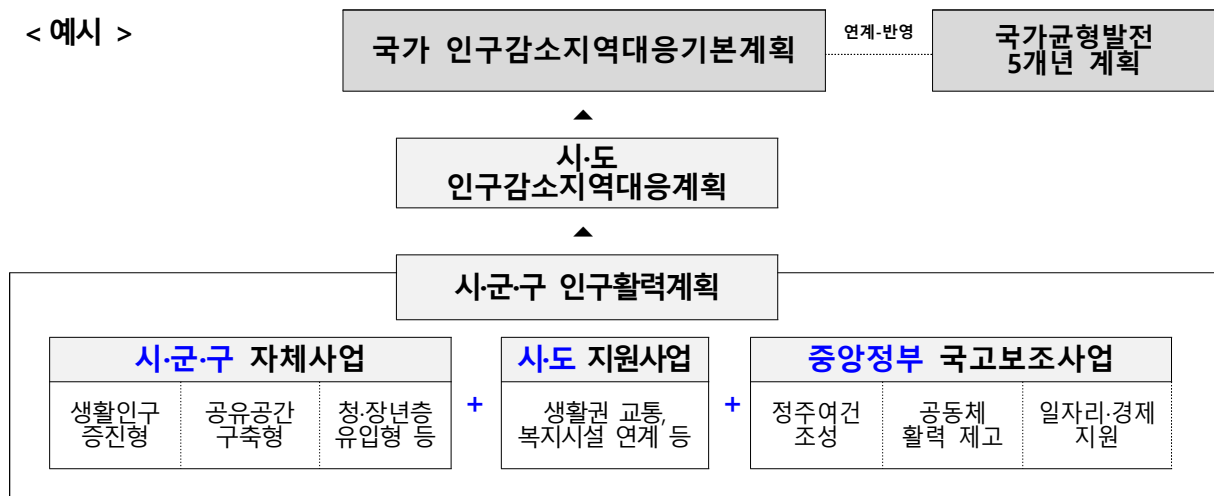
*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활력계획 수립 시 실정에 맞는 전략 수립, 사업 발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('22년 신규사업)

⇒ 지역은 '자체사업 + α(시·도 및 중앙정부 지원 등)' 규모로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여 패키지로 추진함으로써 정책 시너지 효과 확대

□ 시·도 및 국가의 인구감소대응계획 연계·반영

- 지역 인구활력계획을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('22~'26)에 반영
-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('23~'27)과 연계·반영

< 예시 >



2. 지역의 정책 실행력 강화 지원

◇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인구활력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
기금, 국고보조사업 등 안정적 재정 지원 및 역량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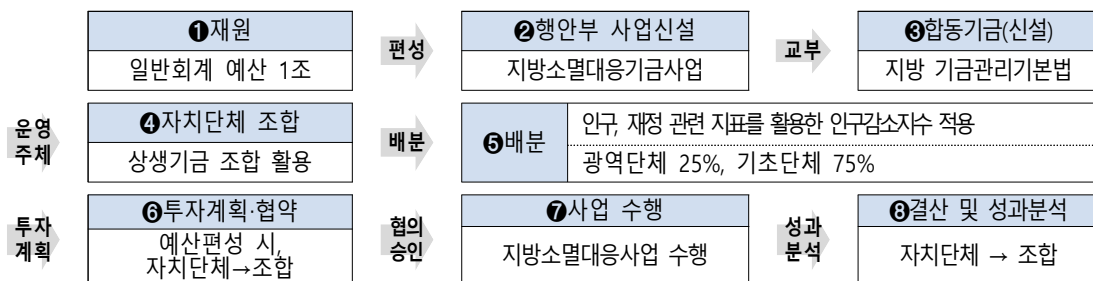
①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

□ 지방소멸대응기금(연1조, '22년~'31년) 지원

<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>

- (재원) 국가 일반회계 예산(1조원) 확보 →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신설 후 예산편성 → 사업예산 전체를 지방소멸대응기금(자치단체합동)에 교부
- (배분) 광역25%, 기초75% / (산식)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
- (용도)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적합한 사업에 활용

< 기금 운영절차 >



-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,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소멸대응기금(연1조원) 도입
- 지역 주도로 투자계획을 수립·추진하면, 행안부는 계획수립·사업 추진·성과분석 등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하여 효율성 제고

□ 범정부 협업 국고보조사업('22년 기준 2조5,600억원 규모) 우대 지원

- 각 부처(농식품부, 국토부, 해수부, 교육부, 복지부 등)의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적합한 분야별 정책협력* 추진
- * 인구감소지역에 가점 부여, 공모기준 완화, 사업 일정량 할당 등 실질적 혜택 지원
- (일자리·경제)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확충(2.6만명)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마중물 지원
- (입주·정착) 청년마을 조성(연 12개소), 귀농·귀어 컨설팅 등(191억원)

- (공동체 활력제고) 소통협력 공간 조성(102→ 122억원) 등
- (생활여건 개선) 도시재생(0.8→0.9조원), 접경·섬지역 LPG 인프라(122억원), 문화취약지역 활력제고 프로그램(46억원) 등
- (기반조성 등) 인구감소지역 계획수립 역량강화(20억원) 등

(단위 : 억원)

소분류	'21년	'22년	'22년 중점 투자 방향
계	23,570	25,600	○ 전년대비 +8.6%
일자리·경제	8,279	8,784	-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, 먹거리 마중물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
입주·정착	1,109	1,194	- 청년의 지역살이 기회 제공, 귀농·귀어 컨설팅 등 노하우 제공
공동체 활력제고	589	700	-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
정주여건	13,553	14,785	- 교육·의료·생활인프라 문화 등 보강
기반조성 등	40	138	- 지자체 계획수립 역량강화,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등 제공

②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인구활력 제고

- (컨설팅 등) 지역의 주도적 정책 추진을 위해 여건분석, 계획수립, 사업 추진, 성과분석 등 전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와 연계한 컨설팅 지원

< '22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신규사업 주요내용 > ※ '22년 정부안 30억 반영

-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원인분석, 발전방향 수립, 사업 추진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,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분석 방법 도출 및 평가체계 구축 등
- ※ 외부 전문기관 수행, 지역별 컨설팅, 지역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수행과정에서 피드백 제공

- (추진체계) 인구감소 대응 전문기관 설치* 및 기금 투자계획 및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지원을 위한 자문단** 운영 근거 마련 검토

*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」 상 전문기관 설치·운영 규정

**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을 지원하고 주거, 복지, 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, 관계부처 등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

- (지역 간 연계·협력)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설정하여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 시설·서비스 제공 등 상호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*

*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」을 통해 지자체 간 생활권 설정 및 연계·협력 시책 추진, 국가 지원 등 근거 마련 중 / 광역 내 협력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재원 배분

IV. 향후 추진일정

주요과제	담당부처	추진시기
1.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협력 활성화		
초광역협력 추진기반 구축		
· 국토기본법 개정	국토부	~'22.上
·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원	행안부 등	'21.下~
인재.자본.일자리 유입을 위한 성장거점 육성		
·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	국토부	~'22
· 혁신융합캠퍼스 및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선정(각 3개소)	국토부	~'22.上
·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선방안 마련	국토부	~'22.下
· 혁신도시 발전기금 확대 관련 혁신도시특별법 개정	국토부	~'22.下
·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(1차 3곳 준공 및 2차 2곳 착공)	국토부	~'22.下
· 캠퍼스 혁신파크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	국토부	~'22
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		
· 주거플랫폼 시범사업 착수 및 범부처 협업사업 선정	국토부	'21.12
· 도시재생사업 순차적 선정	국토부	'22~
· 농촌공간 정비.재생 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 뉴딜 프로젝트 추진	농식품부	'21~
·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구축 및 귀농·귀촌 지원센터 강화	농식품부	~'23
·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	농식품부	'21~
· 어촌지역 기초 인프라 확충	해수부	'21~
· 어촌지역 신규 진입인력 어촌정착 지원 확대	해수부	'22~
2.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		
지역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		
·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추진	행안부	'21.~
· 지역 주도 인구활력계획 수립	행안부	'22~
지역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		
·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	행안부	'22~
· 범정부 협업 국고보조사업 우대 지원	관계부처	'22~
·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	행안부	'22~